

제 1 장

미국 경제 개관



1. 미국의 국토와 자원 | 2. 미국의 농업 | 3. 미국의 인구와 인종
4. 통계로 본 미국 | 5. 세계 속의 미국 경제



1. 미국의 국토와 자원

(1) 미국의 국토

국토의 면적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국민이 거주하는 장소의 넓이로서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해양자원, 인구와 함께 국민경제의 기반을 형성한다. 미국의 국토는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고 중국이 네 번째로 넓다. 수도 워싱턴 DC, 50개 주(state)와 푸에르토리코 및 괌 등의 해외 영토를 포함한다.

미국 본토는 남북으로 3,100km, 동서로 4,500km에 이르고, 국토의 면적은 982.6만 km²로서, 남한 면적의 94배, 프랑스 면적의 17배, 일본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미국의 면적이 캐나다·러시아보다는 작지만 북극이나 사막과 같은 불모의 땅을 제외한 이용가능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토는 기후나 자연환경, 자원에서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 당시의 영토는 대서양 쪽의 13개 주에 걸친 지역으로 현재 면적의 약 1/5에 불과했지만, 1803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했고, 1819년에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매입했으며, 1845년에 텍사스를 병합했고, 1846년에 영국으로부터 오리건을 획득했으며, 1848년에는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뉴멕시코와 캘

리포니아를 구입했고,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등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 미국의 지하자원

미국의 지하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동부 애팔래치아 산맥에서는 석탄·철광석·보크사이트·동 등이 생산되고, 서부의 록키 산맥에서 텍사스에 걸쳐 석유·천연가스 등이 생산되고 있다. 1913년에는 미국은 천연가스·석유(세계 생산의 65%)·동·석탄·철광석·은 등은 세계 최고의 산출량을 기록했고 금은 2위였는데, 석탄·석유·천연가스·철광석·동광석 등이 대규모로 생산되어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미국은 20세기 전반까지는 천연자원 수출국으로서 경제발전에 대한 천연자원의 기여도가 높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중요한 성장요인이 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동 지역의 신흥 산유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고 전략적 관점에서 국내 석유를 보존했기 때문에 원유의 수입의존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7년의 경우 원유를 포함한 1차 에너지(괄호 안의 숫자는 원유 비율)의 해외의존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21.0%(36.6%), 영국이 32.9%(45.4%), 당시 서독이 63.9%(95.4%), 프랑스가 82.6%(95.2%), 일본이 94.9%(100.0%) 등으로, 미국의 에너지 해외의존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에 국내 채굴 석유와 함께 많은 양의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유전 개발과 함께 셰일가스 채굴 기술의 발달에 따라 2008년부터 셰일오일 채굴의 증가로 원유 생산이 증대되면서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1일 원유 생산량은 미국이 15.0백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2.0백만 배럴, 러시아의 11.0백만 배럴, 중국의 4.7백만 배럴보다 많았다. 미국에서 셰일오일의 생산이 크게 증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다량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서 석유화학·태양광·전기차 등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원유 소비량 가운데 미국 국내 원유의 공급 비중이 2015년에 55%를 기록해 수입원유 비중 45%를 초

▶▶▶ 셰일가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은 지하 1km 이하에서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어진 퇴적암(셰일 : shale)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와 오일을 말한다. 확인된 셰일가스 매장량이 기존 천연가스 매장량의 1/3에 달해 앞으로 6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미국에서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생산이 급증했다. 2005년에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에 따라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2015년에는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2015년 12월에는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며, 2020년대 초에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2030년에는 석유를 자급자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5%에 불과한 셰일오일의 가격은 배럴당 약 50달러 수준으로, 국제 유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OPEC 등 산유국들이 셰일오일의 급성장을 막으려는 전략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가 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생산이 다소 회복되었다.

셰일오일의 증산은 직접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고비용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미국 제조업이 저렴해진 에너지 가격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부흥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채굴과정에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

과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에 의한 이라크 공격 결정에는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를 통해 국제질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한 원유 수입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되었다.

2008년의 금융 위기 이래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낮을 뿐 아니라,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에 따라 원유

생산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원유 생산 규모 축소를 거부했고, 경제 제재가 완화된 이란이 증산을 원하면서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들 간에 생산 축소를 통한 원유 가격 지지에 대해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2014년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이하로 하락했고 2016년 초에는 40달러 선까지 폭락했는데 산유국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에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11개국이 2017년 1월부터 하루 56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하자 유가는 50달러를 상회했다.

2. 미국의 농업

(1) 세계 최대의 농업국

광대한 영토의 약 20%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축을 포함하는 농업용지가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세계 전체 농업용지의 약 2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조건이 세계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2009년까지는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기도 했다. 애팔래치아 산맥에서 록키 산맥에 이르는 대평원은 세계적으로 비옥한 토지로서 수많은 농작물이 생산되는데, 식량 자급률은 128%에 달하여 국내 소비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잉여 농작물을 세계로 수출했다. 미국은 쌀·소맥·대두·면화 등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세계의 곡창’으로도 불렸는데, 전체 농지의 약 1/3이 수출용 농작물을 경작했다. 농업은 2013년에는 소비재와 부동산, 헬스케어와 함께 미국의 경제를 이끈 4대 산업에 포함되었다.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농업의 기계화가 진전되었으며 경작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1세기 전만 해도 미국 노동력의 절반이 농장에서 일했는데, 1990년대에 이 숫자가 3%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에는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포함하는 농업 관련 산업의 고용은 적지 않다. 미국의 농업은 비옥한 토지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 기계장비 등에 의존한 농업생산성의 상승은 제조업

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 1950년을 100으로 할 때 1975년의 생산성지수를 보면 비농업부문은 218인데 비해 농업부문은 447에 달했다. 미국의 농가소득이 20세기 전반에는 비농가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았지만 후반에 들어서 평균소득이 서로 수렴하여 1990년대에는 차이가 작아졌다.

미국 농업의 최대 고민은 과잉생산에 있었다. 과거 러시아 등 해외 농작물의 흥작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1980년대 이래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의한 농산물 수출 증대 등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농산물 수출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강화했다. 농산물 교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이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21세기 들어서 밀레니엄 라운드 의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2) 미국의 농업정책

미국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개입은 건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 생산과 유통 인프라 건설 등 공적인 투자와 규제를 중심으로 농가 신용, 작물 보험, 자원 보존, 노지 보존 등에 대한 보조금이 주요 인센티브로 제공되었으며, 건강과 식품 안전, 농업 노동자 보호 등의 규제가 실시되었다. 농산물 가격에 대한 규제는 1920년대의 농산물 가격 폭락과 1930년대의 뉴딜 정책에 의해 확대되었는데,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을 실시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과세는 건국 이래 지속되어 왔던 보호무역정책으로 미국은 1960년대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도 농업에 대한 협상을 원치 않았다. 1970년대에 곡물가격이 급등할 때는 수출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유럽과 함께 미국도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농업정책은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특수 이익집단의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요인으로는 로비 기술, 농업정책을 실무부서에 맡기는 연방정부구조, 농업정책에 대한 미약한 반발 등을 들 수 있는데, 정치적 영향

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산물 생산은 소위 녹색혁명에 따라 획기적인 고수확 종자가 개발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1972년 이후 식량부족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산물이 미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국의 농업은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강화되고 수출용 곡물 재배를 위해 거대한 자금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농업은 종래의 중소 농가 중심에서 대규모 농장 경영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초가 되면 미국은 1970년대 초의 3,900만 톤의 3배에 달하는 1억 1,000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곡물 수출량의 60%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곡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 반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하여 EC 역내에서의 농산물 유통을 자유화했고, 역외 수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했으며, 수출 보조금을 증대시켜서 전통적인 식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고 농산물 수출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미국은 1985년 말 농업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미국의 수출 지원에 대항하여 EC 등의 경쟁국들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보호주의의 배제, 시장원리 강화의 기초 위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를 도입했고 수출보조금의 삭감을 중요 내용으로하여 타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의 공급과잉이 조정되면서 세계 농산물 수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후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추세 속에서 농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이 선택되고, 경쟁력을 지닌 농작물이 생산·수출·수입되며, 채산성이 있는 농산물이 주로 재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3) 농업기업의 성장

농업 생산에서 생산의 특화, 농장의 대형화, 품목 특화의 진행, 농민의 위험 부담을 축소하는 계약 체결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었고,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산물 생산은 소득원의 일부분만 차지했다. 곡물메이저로 불리는 거대 다

국적 곡물상들이 세계적으로 곡물의 유통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가공공장에서 사료와 비료를 제조하는 농업기업(agribusiness)으로 성장했다. 한국에서 2003~2008년 수입한 곡물 중 카길(Cargill),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Archer Daniels Midland, ADM), 병기(Bunge), 루이 드레퓌스(Louis-Dreyfus, LDC) 등 상위 4대 곡물메이저(ABCD)에 의존하는 비중이 밀은 46.7%, 콩은 46.4%, 옥수수는 62.4%에 달했고, 대두는 일본의 마루베니(Marubeni)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52%를 차지했다.

농작물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패나 해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공학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병충해 등에 강한 작물을 개발했는데, 이렇게 실용화된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등장으로 ‘제2의 녹색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단일작물의 재배로 식물다양성이 희생되고, 자연조건을 무시한 대량 생산으로 토양의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졌다. 세계 유전자변형 농작물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2013년 생산된 옥수수, 목화, 콩, 사탕무의 90~98%가 유전자변형 품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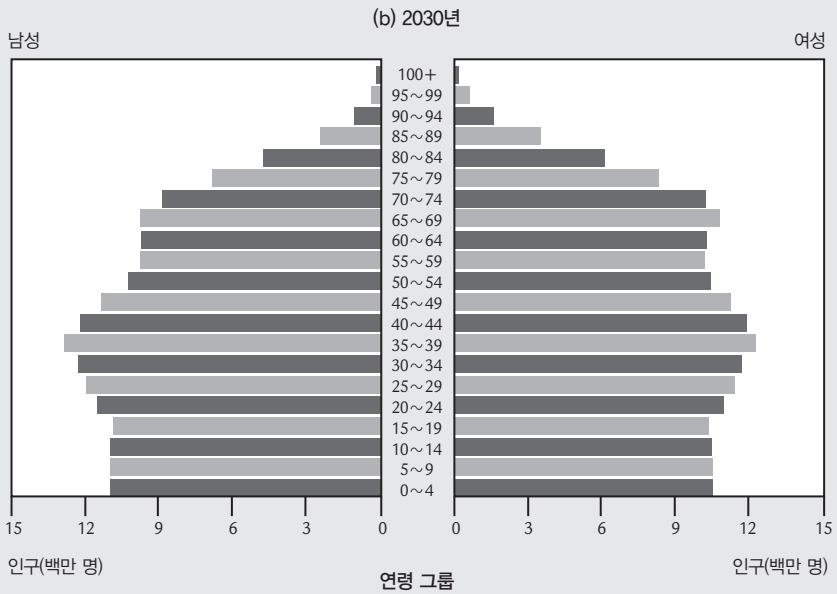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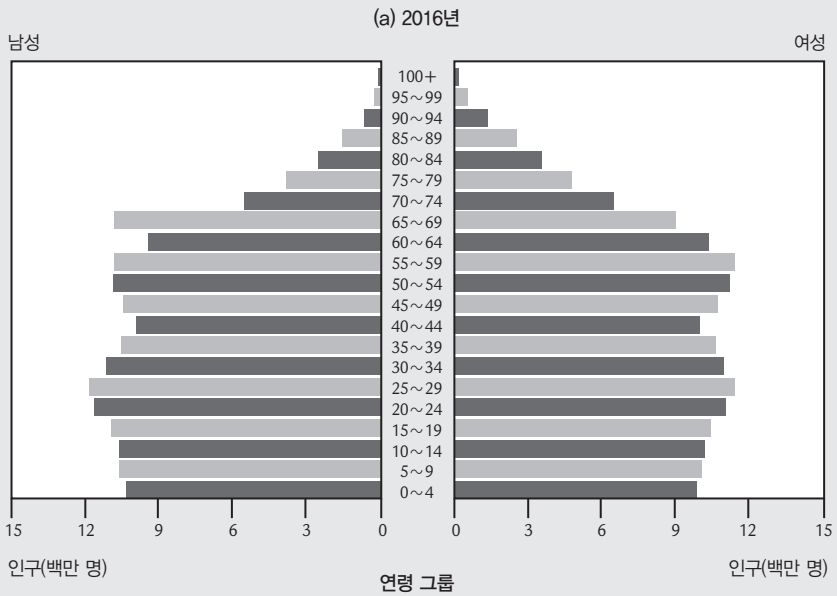
최근 미국 농업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증가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초대형 농기업의 증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3. 미국의 인구와 인종

(1) 미국의 인구

인구는 인적 자원이자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 미국은 광대한 면적에 걸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미국의 인구수는 중국과 인도 다음이다. 1800년에 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00년에 7,489만 명, 1950년에 1억 5,070만 명이었는데, 2015년 말 현재는 3억 2,276만 명에 달했다. 이는 1960년의 1억 8,067만 명에 비해 약 79% 증가한 규모이다. 2006년에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하자 미국인 1명의 평균 소비·배출량이 세계 평균 대비 에너지 소비는 4.9배, 물 사용은 2.7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배, 쓰레기 배출량은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림 1-1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참조). 인구의 고령화는 신생아 출생이 줄고 평균수명은 길어지면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이민 수용 문제, 노령인구를 위한 자원 조달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 등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청장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국가’의 인구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서부 유럽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고 이민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 고령화 문제의 심화

미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개인 자산에서 80%, 소비에서 50%, 의료비에서 75%, 여행비에서 75%를 차지하면서 미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2010년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수령 대상자가 1980년대의 39%에서 현재는 15%로 감소했고, 연금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 가치가 하락했으며,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많이 의존하지만 주택가격이 크게 등락했고, 소비 위주 생활로 저축률이 낮으며,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의료보험료는 늘고 보장은 줄고 있었던 것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를 초래할 수 있고 노동연령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의료보험 관련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키려면 미국의 노동력 공급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이민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3) 미국의 인종

미국은 다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과거에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부터 새로운 이민자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유럽계

중심의 ‘용광로’가 아니라 ‘모자이크’, ‘샐러드 접시’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과거에 미국 사회의 주류 지배계층을 와스프(White Protestant, WASP)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백인 앵글로-색슨계(Anglo-Saxon) 개신교도들이 집단으로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백인에 대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2014년의 미국 인구 중에 백인은 62%, 흑인은 12%, 히스패닉은 18%, 아시아계는 6%, 원주민은 1%, 혼혈인은 2%를 차지했다. 미국으로 유입된 다양한 새로운 이민자들이 중산층으로 상승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낙후된 인종은 원주민과 흑인들이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나 흑인 문제를 냉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소위 자유의 나라는 미국에서 유럽 등지에서 노예제가 사라질 무렵 오히려 노예제가 강화되었고, 노예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억압이 지속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내전을 치른 유일한 국가이다.

(4) 인종 문제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이지만, 인종별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5년 총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국부의 2.5%를 보유하고,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는 국부의 2.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포브스 400대 부자에 흑인은 2명, 히스패닉은 5명만 포함되었다.

미국에서 흑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은 매우 낮다. 1980년의 실업률이 평균 7.1%였을 때 흑인의 실업률은 14.3%, 히스패닉은 10.1%에 달했다. 평균실업률이 5.2%였던 2016년 1분기의 경우 백인의 실업률이 4.6%인 데 비해 흑인은 그 2배에 달하는 9.0%였고, 아시아계는 3.8%, 히스패닉은 6.1%였다. 16~19세 청소년 실업률의 경우에는 백인 14.4%에 비해 흑인은 23.2%, 아시아계는 10.8%, 히스패닉은 15.5%에 달했다. 2015년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흑인 아동은 34%에 불과하여 74%의 백인 아동이나 히스패닉의 60%, 아시아계의 83%와 대조를 이루었고, 어머니만 함께 사는 흑인 아동은 49%에 달하여 15%의 백인 아동이나 히스패닉의 26%, 아시아계의

11%와 크게 대조를 보였으며, 흑인 아동의 70%가 혼외 출생이었다. 2013년 미국 아동 14명 중 1명의 부모 1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흑인 아동은 9명 중 1명의 부모 1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당한 사건 이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고 외치는 민권운동이 빈발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종 문제는 성별, 학력, 종교, 세대와 함께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저학력 ‘백인들의 분노(Angry White)’가 표출되었다고 평가받는 2016년 대통령 선거의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9%를 차지하는 백인의 58%가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백인의 37%와 흑인의 88%와 히스패닉의 65%가 민주당의 클린턴에게 투표했다. 18~44세 연령층은 클린턴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은 트럼프에게 더 많이 투표했으며, 고졸 이하 학력자의 52%가 트럼프를 선택했고 44%가 힐러리를 선택했다.

(5) 이민자 문제

미국 독립 당시부터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으로의 이민이 많았던 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1800년 당시 미국의 임금은 서유럽보다 약 30% 높았으며 넓은 토지에 농업화가 지속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19세기 전반에 걸쳐 높은 임금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기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을 높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이민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 아시아계 이민과 중남미 출신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주로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크게 기여했다.

합법 이민 못지않게 비합법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불법이민자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비화했다. 불법이민자는 2007년에 1,220명으로 정점에 달했고 대침체 이후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불법이민자가 1,110만 명에 달했고 그중 멕시코계가 580만 명, 기타 지역 불법이민자가 530만 명이었는데, 외국출생 이민자의 25.5%가 불법이민자였다.

특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 주민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최대 소수인종을 이루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주요 압력집단으로 떠올랐는데, 2050년에는 미국 인구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중 약 60%를 멕시코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점 때문에 불법 입국도 급증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남서부는 광업과 농업이 활발했고 항공, 군사, 정보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국제경쟁과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숙련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가 2016년 선거에서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기도 했고, 인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인들이 결집하며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4. 통계로 본 미국

OECD의 미국경제조사(*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6*)에서 미국의 영토, 인구, 경제, 대외경제, 정부, 노동시장, 환경, 사회 등에 대한 통계치를 OECD 평균치와 비교했다(표 1-1 참조). 이에 따르면, 인구 중 15세 이하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65세 이상의 비중은 낮아서 ‘젊은 국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상 수명은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서 비효율적인 의료제도의 문제를 반영했다. 국내총생산의 최근 5년간 실질증가율은 2.0%로서, OECD 평균의 1.7%보다 높아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줬고,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54.4천 달러로 OECD 평균 39.2천 달러보다 높았다. 실업률과 노동시장참여율에서 미국은 OECD 평균보다 양호했지만 평균노동시간은 더 길었다.

환경에서 1인당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은 6.9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toe)으로 OECD 평균의 4.1보다 높았지만, 1인당 연료연소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16.2로 OECD 평균의 9.5보다 크게 높았다. 사회 면에서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0.401로 OECD 평균의 0.308보다 크게 높았으며 최하위 10%의 소득에 비한 최상위 10% 소득의 비율은 미국이 17.6으로 OECD 평균의 9.6보다 매우 높았다. 또 의회 의원 중 여성의 비중은 19.4%로 OECD 평균인 28.6%보

다 낮았다.

표 1-1 통계로 본 미국

영토, 인구					
전체인구(백만 명)	318.9		최근 5년 인구 증가(%)	0.8	(0.5)
15세 이하(%)	19.2	(18.3)	예상 수명(년)		
65세 이상(%)	12.6	(13.6)	남성	76.4	(77.8)
외국 출생(%)	13.1		여성	81.2	(83.1)
경제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 비중(%)		
경상가격(10억 달러)	17,947		1차 산업	1.3	(2.5)
실질증가율(최근 5년평균, %)	2.0	(1.7)	제조업(건설 포함)	20.7	(26.4)
1인당 GDP(천 달러, PPP)	54.4	(39.2)	서비스업	78.0	(71.1)
정부(GDP 대비, %)					
지출	37.8	(42.3)	총금융부채	113.6	(118.7)
수입	33.5	(38.5)	순금융부채	88.5	(76.0)
대외 경제					
달러당 유로 환율	0.90		상품수출 중 비중(%)		
PPP 환율(미국 = 1)	1.00		기계 및 수송장비	34.1	
GDP 중			화학 및 관련제품	13.1	
수출(재화 및 서비스)	12.3	(28.8)	상품수입 중 비중(%)		
수입(재화 및 서비스)	15.5	(28.6)	기계 및 수송장비	39.7	
경상수지	-2.70	(0.1)	기타 제조업 제품	15.0	
순국제투자포지션	-40.5		광물연료 및 관련제품	14.8	
노동시장, 기술 및 혁신					
고용률(15~64세, %)	68.7	(66.2)	실업률(15세 이상, %)	5.3	(6.8)
남성	74.2	(74.1)	청소년(15~24세)	13.4	(15.0)
여성	63.4	(58.5)	장기실업(1년 이상)	1.4	(2.5)

참여율(15~64세, %)	72.7	(71.2)	대학교육(25~64세, %)	44.2	(33.6)
평균노동시간(년)	1,789	(1,770)	R&D지출(GDP 중, %)	2.7	(2.4)
환경					
총 1차 에너지 공급 (1인당, toe)	6.9	(4.1)	연료연소 CO ₂ 배출 (1인당, 톤)	16.2	(9.5)
재생에너지(%)	6.5	(9.2)	용수 추출(1인당, m ³)	1,582	(819)
미세먼지(PM 2.5, µg/m)	10.7	(14.0)	도시 용수(kg)	725	(516)
사회					
소득불평등(지니계수)	0.401	(0.308)	교육 성취도(PISA, 2012)		
상대적 빈곤율(%)	17.6	(11.2)	읽기	498	(496)
최상위 10%/최하위 10% 소득 비율	18.8	(9.6)	수학	481	(494)
공공 및 민간 지출 (GDP 비중, %)			과학	497	(501)
건강관리, 경상지출	16.4	(8.9)	여성 의회의원 비중(%)	19.4	(28.6)
연금	6.8	(8.7)	순공식개발지원(GNI 비중, %)	0.2	(0.4)
교육(초·중·고)	3.6	(3.7)			

(2015년 또는 최신 통계치, 괄호 안은 OECD 평균)

5. 세계 속의 미국 경제

세계 속의 미국 경제의 위상은 매우 높다. 미국 CIA의 세계 팩트북(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중국, 인도에 이어서 약 3억 2,100만 명으로 세계 3위, 국토는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표 1-2 참조).

GDP는 2015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18조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 11조 4,000억 달러, 일본 4조 1,000억 달러, 독일 3조 4,000억 달러, 영국 2조 9,000억 달러, 프랑스가 2조 4,200억 달러 순이었으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카타르, 룩셈부르크가 1, 2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19위를 차지했는데,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미국이 55,904달러로 5

위, 중국이 8,280달러로 75위, 일본이 32,481달러로 25위, 독일이 41,267달러로 19위를 차지했다. 출생 시 예상 수명은 79.7세로 선진국들 중에서 낮았고, 실업률은 5.20%로 양호한 편이었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38위를 차지했고 GDP 대비 군비지출은 9위를 차지했다. 수출은 2위, 수입은 1위를 차지했고, CIA의 세계 팩트북 기준으로 원유 생산은 3위를 차지했다.

표 1-2 주요국의 경제 지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인구(백만 명)	321(3)	67(21)	81(17)	127(10)	1,367(1)	49(27)
국토(백만 km ²)	9.83(3)	0.64(43)	0.36(63)	0.38(62)	9.60(4)	0.10(109)
예상수명(년, 출생 시)	79.7(42)	81.8(19)	80.6(32)	84.7(2)	74.5(98)	80.0(38)
GDP(조 달러, PPP)	18.0(2)	2.6(10)	3.8(5)	4.7(4)	19.5(1)	1.8(13)
1인당 GDP(천 달러, PPP)	55.8(19)	41.4(38)	47.4(29)	38.2(42)	14.1(112)	37.8(47)
실업률(%)	5.20(56)	9.90(114)	4.80(49)	3.30(27)	4.20(42)	3.50(31)
공공부채(GDP 대비, %)	73.6(38)	98.2(19)	71.7(43)	227.9(1)	16.7(156)	34.9(125)
군비지출(GDP 대비, %)	4.35(9)	1.80(47)	1.35(73)	0.97(101)	1.99(40)	2.80(25)
수출(조 달러)	1.6(2)	0.5(6)	1.3(3)	0.6(4)	2.3(1)	0.5(5)
수입(조 달러)	2.3(1)	0.5(6)	1.0(3)	0.6(4)	1.6(2)	0.4(11)
원유 생산(천 BBL/일)	8,653(3)	15(75)	49(57)	5(83)	4,189(4)	0

(괄호 안은 세계 국가 순위, 유럽연합은 제외; 2015)

제 2 장

미국 경제의 제도적 특징



1. 자유시장경제 | 2. 연방정부와 지방분권 | 3. 법률제도 | 4. 독점금지법
5. 규제 개혁 | 6. 노동조합 | 7. 은행제도 | 8. 대통령과 경제정책
9. 정치적 타협으로서의 경제정책 | 10. 국제 경제외교 | 11. 평등
12. 교육 | 13. 의료보험 | 14. 환경 | 15.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



1. 자유시장경제

미국 사회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서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계약의 자유, 경쟁의 자유, 기회의 평등,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적자생존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 경제 중에서도 미국 경제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기업체제를 가지고 있다. 민간 활동이 존중되고 공공 권력의 개입이 가능한 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경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지만, 정부가 안정과 성장, 규제와 통제, 직접적인 서비스와 직접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수송 부문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농민이나 노동자, 소기업이 자신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서 전문 경영자들과 다소 급진적인 중산층이 나타나면서 경쟁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기업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활동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 독점금지법, 공익사업관련법 등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특히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에서 민간 활동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개입을 배제하려는 풍조가 큰 전환을 이룬 것은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이 계기였다. 가장 큰 성과로는 노령자에 대한 의료보험(medicare, 메디케어)과 빈곤자에 대한 의료보조(medicaid, 메디케이드)의 복지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민간병원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다시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시장경쟁을 극히 중시하는 시장만능주의적 사고가 존재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 크게 확산되었다.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는 조세 및 정부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 민영화를 근간으로 했다.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정부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촉진된 시장경쟁의 격화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업 활동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레이저노믹스는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산업공동화, 빈부격차의 확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공존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고 정부의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재규제(reregulation)가 진행되었는데,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30여 년에 걸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서 ‘큰 정부’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여, 서브프라임 사태 이래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 경제 파급으로 위기 상태에 있던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적극적 시장 개입을 추진했다.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정서가 강한 미국에서 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는 위협에 대해서 라이시(Robert Reich) 교수는 자본주의를 구하라(*Saving Capitalism*)에서 ‘자유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시장’을 ‘자유’와 동일시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의 불균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시장체제에서 대기업의 경제 권력이 강력해지고 최상위 1%의 지대 추구에 따른

불평등이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마비시키며 민주주의 제도가 최상위 1%의 특권을 위해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경제학자 린드블롬(Charles Lindblom)은 시장에는 교환을 통한 효율성 추구 이외에, 시장 교환 이전에 역사·관습·법·권력 등에 의해 자산과 기술의 분배가 강제적으로 미리 결정되는 선행결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선행결정에 의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제약을 받게 되고 시장 교환의 파급효과,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시장 지위의 불평등, 무지와 조작과 같은 강제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료가 기업의 요구에 잘 부응하게 되고 시장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제휴에 의해 통제되면서 엘리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만 대중들이 원하게 되는 전도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연방정부와 지방분권

미국의 각 주(state, 州)는 지리적·기후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금연이나 금주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웃 주나 시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지방세를 낮추고 교육수준을 높이고 도로를 개선하고 치안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들 간에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연방과 주로 이원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란 국명에서 보듯이 그 건국 과정에서부터 주의 연합체였고 주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구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 헌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이 아니며 연방정부의 권한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주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사법, 경찰, 기타 기관도 있어서 주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주의 권력은 교육, 소방, 경찰, 공공시설 관리, 공적 자격이나 면허 부여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하며 강한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주는 연방과 별도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전체 수입의 3/4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주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사회보장이나 의료, 교육